

교사가 시중 참고서 베껴 기말고사 문제 출제 ‘시끌’

광주 풍암고 수학 12문항... 17일 12문항만 재시험에 형평성 논란도
학생·학부모 “잘못은 교사가 했는데 피해는 학생에 고스란히” 불만
“자칫하면 내신등급 뒤흔칠라” 불안감 속 학교측 “달리 방법이 없다”

광주 풍암고가 1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를 시중 참고서에서 베껴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1학년 전체 227명의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일부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놓고도 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출제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기존 내신 성적의 변경에 따른 형평성 갈등도 불거지는 등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일 치러진 풍암고 1학년 기말고사 중 수학 과목의 경우 22개 문항(객관식 18개·단답식 4개) 중 12개 문항(객관식 10개, 단답식 2개)이 시중 참고서에서 베껴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여 풍암고 방과후 수업인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반 A'에서 교재로 사용

됐던 문제집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수학1'에 수록된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문항은 문제집에 실린 문항과 지문, 정답까지 완전히 일치했고 주관식 문항 일부는 객관식 문항으로 바뀌 출제된 점도 확인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학 과목을 맡고 있는 세 명의 교사가 공동 출제했고 문제가 된 문항의 경우 한 교사가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지난 9일 학생·학부모의 이의 신청이 풍암고와 교육청에 접수된 데 따라 풍암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론냈다.

해당 교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암고는 오는 17일 1학년 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12개 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학생·학부모들은 교사의 잘못으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재시험을 치르면서 겪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뿐 아니라 재시험 결과와 이미 시험을 치른 수학 성적이 달라 내신 등급이 바뀔 수 있는 불안감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실상 재시험 문항을 틀렸던 학생들은 다시 성적 상승의 기회를 잡게 되면

서 재시험을 보지 않는 문항을 틀렸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풍암고 측은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문제가 된 일부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재시험으로 인해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풍암고 관계자는 “성적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위해 상담을 연계하고, 진로·진학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진로 지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제 경위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민경 기자 minky@

‘화재’ 조선대병원 수술실 정상화 차질

안전진단 분석 결과 안 나와 재가동 못하고 수술 70여건 보류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기존에 예정됐던 70여건 넘는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등 의료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병원 측은 “15일까지 수술실 정상화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상화가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수술 일정도 기약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은 “수술실 정상화 작업이 늦어져 빨라도 오는 17일부터 수술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15개 수술실은 지난 14일 7번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면 폐쇄됐다. 병원 측은 7번 수술실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수술실을 우선 정상화해 수술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병원 측은 화재 다음 날인 15일까지 정상화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광주동부소방의 안전진단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술실 재가동은 불발됐다.

수술실을 재가동하더라도 수술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각 수술별로 진료과 특성과 응급상황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해 전문의들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 측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수술 50여건을 보류한 데 이어 16일 예정된 20여건 수술까지 모두 보류했다.

환자들은 언제 수술이 재개될 지 모르는데 담당의사로부터 “수술 재개까지 수 주 걸릴 수 있다”는 언질을 받기도 해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미 조선대병원에서 수술 전 모든 검사를 마친 이들은 이제와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조선대병원에서 만난 환자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수술까지는 2~3일이 될 수도 있고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수술 마치고 2주 정도 입원후 퇴원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수술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또 “사고 시점 직후에 수술이 잡혀있었는데, 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의료기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유해물질 잔류 여부에 대한 공기질 분석 등도 함께 진행하는 등 철저한 안전진단을 거쳐 수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립요양병원 점거 농성 노조원 11명 징역형 구형

검찰이 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A(55)씨 등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광주검찰은 이날 A씨 등 노조원들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적법한 정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병원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이나 진료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로비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유연재 기자 yjiyou@



소비쿠폰 지급 불편 없게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추락사고 광양제철 배관 철거 작업 중지 명령

실제 추락 2명...1명은 숨져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15일 추락사고로 작업자가 숨진 데 따라 공장 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A(63)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께 같은 금속제조업체 직원 B(36)씨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공장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 철거 작업

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들이 철거에 나선 배관은 공장 내부의 먼지와 유해 입자를 빨아들이는 집진기로, 철골구조물이 직사각형 형태로 배관을 감싸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인근 철골구조물에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배관 절단 작업을 했으나,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여m 높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을 지시하던 C(64)씨도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을 땐 3명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추락한 것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경찰청은 작업과정에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